

# 스스로 발목 잡는 전북 문화관광재단

## 한희경 도의원, “경력·직무연관성 무시한 전보조치로 조직운영 불안정성 키워… 내부 의견수렴은 전무”

전북도의회 한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출범 3년차를 맞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설립 취지와 인사규정 상 전보원칙에 어긋나는 뒤죽박죽 전보인사로 조직운영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초 전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설공연추진단(5명)과 신설된 홍보팀(2명)을 제외한 6개 팀 현원 16명 중 10명에 대해 부서를 옮기는 전면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보직은 직무연관성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기타 적성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체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재단 인사규정에 위배된다.

재단 입사 전 경력과 입사 후 최초 배치 부서 등 개별 직원의 직무조건이나 경력과는 동떨어진 부서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공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이후 소리축제와 새만금상설공연에서 공연제작과 진행 등 공연현장에서 활동하던 직원이 재단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이나 신규공모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재단의 총괄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팀에 배치된 사례같은 경우이다.

또한 입사전부터 입사 후까지 일관되게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직

원을 모두 이질적인 부서로 분산 배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재단으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추진하던 팀장급 직원이 이번 인사이동에서 전혀 경험과 직무지식이 없는 문화예술교육팀장으로 바뀐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대폭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은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부서를 이끄는 팀장급 의견만이라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하지만 전보가 이뤄진 팀장들과

저도 다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의 수월성을 제고하지는 게 재단의 근본적인 설립목적이자 취지인데 개별 직원의 경력과 직무연관성을 무시한 채 전보인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재단 설립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폭적인 전보인사는 조직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신중해야 하지만 자금채널 재단의 조기연착륙이 기대만큼인 상황에서 인사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은 갈 길 바쁜 재단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에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지방선거기획단장에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지방선거기획단장 선임을 시작으로 향후 위원들을 추가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기획분과, 정책분과, 조직분과 3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며, 지방선거 전략수립과, 공약개발, 조직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위원들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당내외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활동하며 빠르면 주중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해 대선에서 전북은 전국 최고득표율을 기록하며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대선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병우, ‘최순실 방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실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검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협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반 조건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에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계이름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지난해 5월1일과 6월2일 2차례 공판준비 기일 이후 후 33번째 공판 만에 이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4월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 진흙탕 국민의당... 사실상 이혼서류 도장 평가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추진 및 '179명 무더기 징계'와 민주평화당 창준위의 창당발기인대회로 국민의당 내 갈등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양측이 29일 서로를 원색 비난하며 진흙탕 설전을 펼친 가운데 사실상 통합 찬반파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평화당 창준위 측을 향해 “국민적 열원인 동서회합, 미래를 위한 개혁의 가치는 편협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별도 창당까지 하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단절해야 할 구태정치의 마지막 그림자를 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통합을 저지하려는 분들이 별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어이 발기인대회까지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당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당무위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언, 자신의 179명 무더기 징계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 측은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 김삼화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창준위 측의 당비 대납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으로 대납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정싸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평화당 창준위 측은 안 대표에 대해 공개 비난을 이어갔다. 조매숙 창준위원장은 “헤어지는 마당에 덕담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뒤끝이 유지하다”고 안 대표의 징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비난했다. 그는 또 창당발기인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 징계를 거론하며 “전무후무한 코미디”라고 혹평했다.

## 안 “구태정치 그림자” 창준위 “초당 전쟁게임”



“배경판 마음에 드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 제1차 확대대회에 참석해 배경판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역시 창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안 대표가 제왕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본인의 협랑함을 먼 후대까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초당이 전쟁게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사회권을 박탈당한 이상돈 의원은 “뻔뻔한 안철수식 정당 파괴 사태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법원의 전당대회 개정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호소한 뒤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당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원

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건 정당과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바른정당이 뒤통수 맞았다”며 “화개장터에서 동서회합 축제를 기획하는데 유 대표는 TK(대구·경북)을, 안 대표는 호남을 배신하고 능욕했다. 두 배신자가 모여 만든 정당이 동서회합은커녕 무엇을 할지 의심된다”고 통합신당을 촉구했다.

한편 그간 통합 찬반파 사이에서 고심하던 당내 중재파 의원들은 금명간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안 대표와 오찬을 하며 전당대회 전 사퇴 중재안 수용을 최종 압박한다. 한 중재파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중엔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재파의 고심도 여간 길지 않다. 안 대표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신당을 지지하든 명분이 약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든 아직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하다. 한 중재파 의원 측은 “당에 남으면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고 새 동지를 틀기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토로했다.

## 민주당, 가짜뉴스 211건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짜뉴스 관련 200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을 고소·고발했다.

고소 내용으로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별비 관련 가짜뉴스 등이다.

또 명예훼손 관련 고발에는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국회의원 ▲민주당 박영선의원 사진 및 합성사진 유포 건이 포함됐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